

#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 관리현황과 효율적 관리방안<sup>†</sup>

## A Study on the State and Efficient Management of Marine Protected Area in Korea

박성욱\*·이주아\*\*

Park, Seong Wook · Lee, Jooah

### 목 차

- I. 서 론
- II.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국외동향
- III. 우리나라의 해양보호구역 관리
- IV. 해양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행위제한과 관리 문제점
- V. 결론: 해양보호구역 관리의 실효성 강화 관리방안

Abstract: As global climate change intensifi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preparing international countermeasures. These efforts are based on the adoption of the 1992 Climate Change Convention, the adoption of the Kyoto Protocol in 1997, the adoption of the Paris Climate Agreement in 2015, and the Strategic Action Roadmap on Oceans and Climate(2016-2021) in 2016 was adopted, the Paris Climate Agreement entered into force on January 1, 2021, and the United States returned to the Convention ('21.2.19.), etc. These effort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re moving rapidly towards the goal of being carbon neutral by 2050.

Given that the sea serves as a means of carbon storag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making efforts to preserve the value and biodiversity of the ocean. Marine Protected Areas are suggested as the most cost-effective way to recover marine biodiversity and increase the adaptability of the sea to

† 이 논문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주요과제 “기후변화에 따른 동해 연안 갯녹음 유발요인 검증 원천기술 개발(PEA0016)”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 제1저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swpark@kiost.ac.kr

\*\* 교신저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jalee@kiost.ac.kr

climate change. With these specific measur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making various efforts to address climate change. As a result of these efforts, UN SDGs Goal No. 14 (Conserve and sustainably use the oceans, seas and marine resourc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Aichi Biodiversity Goal No. 6 (Fisheries Resource Protection) and No. 11 (achieving 10% of marine protected areas by 2020) require individual countries to implement measures.

Recognizing this point, this paper examines the international trends on the management of marine protected areas, which are suggested as a way to secure the health of the sea. After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related to the management of marine protected areas in Korea, we would like to suggest effective directions for the management of marine protected areas.

**Key words:** Marine Protected Areas, Protection of Marine ecosystem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ND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IPCC)

## I. 서 론

21세기 들어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효과 등 인위적 요인과 화산 폭발, 성층권 에어로졸 증가 등 자연적 요인에 의한 지구 기후변화가 심화되면서,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전 지구적 위험을 평가하고 국제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1988년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공동으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을 설립하였다. 이후 1992년 6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이하 ‘기후변화협약’이라 함)을 채택하고 1997년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여 온실기체에 의해 벌어지는 지구 온난화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sup>1)</sup> 이후에도 2015년

---

1)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20), p. 64.

기후변화협약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 파리기후협약 채택, 제22차 당사국총회에서 ‘해양과 기후에 관한 전략행동 로드맵(2016-2021)(Strategic Action Road-map on Oceans and Climate; 2016 to 2021)’이 채택되고 2021년 1월 1일 파리기후협약 발효, 미국의 협약당사국 복귀(21.2.19.) 등 국제사회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해 빠르게 움직이는 중이다. 파리협정 이행의 마스터플랜은 각 당사국의 자발적 목표치 달성을 유도하는 비구속적 이행 약속인 국가결정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에 일임하여 국제법적 의무는 아니나 참여국가가 자발적으로 이행한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sup>2)</sup> 이처럼 2050년을 목표로 국제사회가 탄소중립 노력을 구체화하고 EU, 미국 등이 탄소국경세 도입을 추진하는 것과 함께 우리나라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방안에 대한 수정여부를 전면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sup>3)</sup>

국제사회는 바다가 탄소저장 역할을 한다는 데 착안하여 해양이 가지는 가치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되는데, 해양보호구역(Marine Protected Area: MPA) 제도가 해양생물 다양성 회복과 기후변화에 대한 바다 적응력 측면에서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목표 14번, Aichi 생물다양성의 목표 6번(수산자원 보호)과 목표 11번(2020년까지 해양보호구역 10% 달성)에서 개별국가들의 이행방안을 명시하고 있다.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기후변화의 주된 원인인 탄소를 바다가 흡수하기 때문에 바다의 건강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해양보호구역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노력에 동참하면서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한 해양보호구역 지정·관리<sup>4)</sup>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더 나아가 국제사회는 연안뿐만 아니라 공해지역까지 그 범위를 넓히려는 적극적 움직임<sup>5)</sup>을 보이고 있다. 2022년 12월 현재 해양보호아틀라스(MPAAtlas.org)는 16,000개 이상의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정보를 목록화하였다.<sup>6)</sup>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생태계서비스는 ①자연재해(쓰나미,

2) 황명준(2021), p. 2.

3) 국민의힘(2022), 대선공약집, p.259.

4) 2022.3월 현재 우리나라 연안에 지정·관리되고 있는 해양보호구역은 총 32개소, 면적 1,798.442㎢에 이른다.

5) 현재 유엔 BBNJ(Biological Diversity in the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 다양성) 정부간회의에서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인 공해와 심해저에서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6) Marine Conservation Institute(2022년 12월 20일)

연안침식 등)로부터의 연안 보호, ②생물종의 생존과 번식 증진, ③어업 이익, ④탄소저장을 통한 기후변화 저감, ⑤관광, 여가, 연구 등의 일자리 창출, ⑥문화적 서비스: 미학적, 예술적, 교육적, 오락적, 과학적 가치 등 매우 광범위하다. 이하에서는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국제동향을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해양보호구역 관리와 관련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뒤 효율적인 해양보호구역 관리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II.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국외동향

### 1.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국제적 노력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한 실행도구로서 1992년 리우환경회의 이후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는바, 해양보호구역과 관련된 국제협약으로는 생물다양성협약, 람사르협약, 세계유산협약 등이 있다.<sup>7)</sup>

생물다양성협약은 생물 다양성을 생태계, 종, 유전자 등 여섯 가지 수준에서 파악하고 생물 다양성의 보전,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배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조약으로, 1992년 채택되고 1993년 발효되었다. 동 협약은 전문(Preamble)과 42개 조항의 본문 및 2개의 부속서(Annex)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크게 가입국의 생물다양성 보전 의무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가입국 간 협력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연안 해양지역의 10% 이상을 보전하고 관리하는 아이치생물다양성목표<sup>8)</sup>를 채택하였다. 해양보호구역은 2000년 해양의 0.7%인 2백만km<sup>2</sup>에서 2019년 11월 기준 해양의 7.4%인 2천7백만km<sup>2</sup>로 증가하였다.<sup>9)</sup> 2014년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된 제6차 세계공원총회(The VIth World Park Congress)에서는 “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는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를 동시에 보전해야 하며 최소 30%에 해당하는 해양

7) 배성환(2005), pp. 1-12.

8)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2022년 12월 20일)

9) Cockerel *et al.*(2020), p.1.

서식처(Marine Habitat)를 포함해야 한다”고 권고<sup>10)</sup>하였으며, 2015년 UN지속가능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목표 14번으로 ‘해양생태계 보전(Life Below Water)’을 채택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각국에 국내 후속계획 수립 및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자연보전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IUCN)은 해양보호구역을 “폐쇄지역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입법으로 유보된 구역으로, 조간대 혹은 조하대 지역과 그 상부 수역 및 관련 동식물,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sup>11)</sup> 그리고 해양보호구역은 사전에 정의된 관리목표에 따라 자연지역의 보호·관리를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경제적 자원, 생물다양성 보존, 종 보호를 할 수 있는데, 이 해양보호구역은 해당 보호구역 내에서 사용이 허용되거나 허용되지 않는 구역을 기술하여 만들어진다고 하였다.<sup>12)</sup> IUCN에서 해양보호역을 관리함에 있어 중요하게 보는 사항은 생태학적 경계를 정의하고 해양보호구역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갖추어야 하며 대중의 지원과 규정준수 감시 및 모니터링을 위한 확립된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sup>13)</sup>

## 2.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개별국가 동향

해양보호구역은 미국과 호주가 선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해양보호구역 지정·관리를 해양대기청과 내부무가 담당하고 있으며,「대통령령 13158(Executive Order 13158-Marine Protected Areas, May 26, 2000)」에 따라 해양보호구역 국가관리체계(National System of MPAs)를 수립하였다. 본 대통령령에서 해양보호구역을 “해양보호 구역은 자연과 문화 자원의 일부 또는 전체를 영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연방, 주, 영토,

10) 한국세계자연기금(2022년 12월 22일)

11) IUCN GA Resolution 17.38(1988) Protection of the Coastal and Marine Environment. “Any area of intertidal or subtidal terrain, together with its overlaying water and associated flora, fauna, historical and cultural features, which has been reserved by legislation to protect part or all of the enclosed environment”. 박찬호(2018), p. 270. 재인용

12) The IUCN defines MPAs as “a clearly defined geographical space, recognised, dedicated and managed, through legal or other effective means, to achieve the long-term conservation of nature with associated ecosystem services and cultural values”

13) IUCN(2022년 12월 22일)

부족 또는 지역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해 보호된 해양환경의 모든 지역을 의미한다.”로 정의하고 있다.

미국은 해양보호구역 기술과 제도적 지원, 모니터링 사업 강화를 위해 미국해양대기청(NOAA) 산하에 국가해양보호구역센터와 지역, 보호구역별 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운영 중에 있다.<sup>14)</sup> 미국은 해양보호구역을 관리하기 위해 정부관계자를 포함하여 관련 전문가, 환경단체, 어업인,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시켜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따른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sup>15)</sup>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연안의 해양보전 및 보호활동들을 재평가설계하기 위하여 1999년 ‘캘리포니아 해양생물보호법(California Marine Life Protection Act)’을 제정하였으며 민관 파트너십을 통하여 지역에 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를 설립하였다. 캘리포니아는 동법 제정 당시 약 70여 개의 MPA가 있었는데 이 법 시행 이후 총 2,200km<sup>2</sup>에 달하는 124개의 MPA를 지정하였다.<sup>16)</sup>

호주는 1897년 세계 최초 MPA 중 하나인 시드니 로열국립공원(Royal National Park)을 해양에 지정한 이후 해양보호구역 관리를 위해 다양한 법률과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sup>17)</sup> 특히 대산호초(Great Barrier Reef Marine Park) 해양보호구역 6개 해역 58개 해양공원<sup>18)</sup>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데,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국에서 관리하며 해양보호구역자문위원회(과학분과, 시민분과)을 운영 중에 있다. 호주는 과거 연방정부가 연방해양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였으나 최근 해양공원(Marine Parks)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호주공원청(Parks Australia)에서 통합적으로 관리<sup>19)</sup>하고 있으며, 해양공원 내에 거주하는 토지소유자, 원주민, 이용자, 다른 정부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고 있다<sup>20)</sup>. 호주공원청은 해양공원 관리를 위해 일곱 개의 프로그램(Seven Programs to Manage Marine Parks)을 시행하고 있는바, i) ‘커뮤니케이션, 교육, 인식 프로그램’으

14) etoday(2016. 6. 30)(2022년 12월 22일)

15) 박수진 외(2019), p. 9.

16) Saarman and Carr(2013), p.42.

17) Yin and Techera(2020), pp.1-15.

18) 약 3.3백만km<sup>2</sup>로 전체 해양의 약 37%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19) 호주공원청은 해양공원을 관리하기 위해 다섯 개의 해양공원네트워크(the North, North-West, South-West, South-East and Temperate East Networks)와 1개의 산호해 해양공원(Coral Sea) 등 총 여섯 개 관리계획(Management Plans)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다.

Australian Marine Parks(2022년 12월 22일)

20) 박수진 외, 상계논문, pp. 10-11.

로 해양공원 및 공원 관리에 대한 인식, 이해 및 지원을 개선하는 조치에 관한 것, ii) ‘관광 및 방문자 체험 프로그램’으로 환경적으로 적합한 고품질의 레크리에이션 및 관광 경험을 제공하고 촉진하며 호주 방문자 경제에 기여하는 활동, iii) ‘토착 계약 프로그램 (Indigenous Engagement Program)’으로 해양지역(sea country)을 돌보고 전통적인 소유주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지원하는 원주민의 지속적인 문화적 책임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행동, iv) ‘해양과학 프로그램’으로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과학적 지식과 해양공원의 가치, 압력 및 대응의 적절성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 v) ‘평가 및 인가 프로그램’으로 해양공원 가치의 지속가능한 사용과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며 투명하며 책임 있는 평가, 허가 및 모니터링 프로세스를 제공하는 조치, vi) ‘공원 보호 및 관리 프로그램’으로 자연, 문화 및 유산의 가치를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기적절하고 적절한 예방 및 복구 조치, vii) ‘준수 프로그램’으로 해양공원 이용자에 의한 적절하고 높은 수준의 본 계획에 규정된 규칙 준수를 보장하는 조치이다<sup>21)</sup>. 호주의 보호구역관리는 여섯 가지 기능으로 나누어 관리<sup>22)</sup>하고 있는데 ①보호구역과 해양국립공원 존(일반시민의 출입을 제한), ②레크레이션 허용존(해양스포츠를 허용한 구역), ③서식지 보호존(중요 종, 군집, 환경의 물리적 특성 보전을 위한 서식처 확보 및 유지를 위한 구역), ④특수목적 존(석유와 가스 추출 등 특수한 목적으로 제한된 지역의 개발을 허용하는 구역), ⑤다사용목적 존, ⑥일반 존이다.

유럽지역에서는 덴마크와 독일, 네덜란드 3국이 인접한 와덴해 국립공원에서의 해양보호구역 관리가 모범사례이다. 와덴해 국립공원은 북해 갯벌 1만3,500km<sup>2</sup>에 이르는 면적을 해양보호구역으로 관리하기 위해 1987년 와덴해 공동관리사무국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3국 공동 모니터링 및 평가 프로그램으로 생태적 목표 달성도를 평가하고 있다.<sup>23)</sup>

21) Australian Marine Parks(2022년 12월 22일)

22) 해양환경공단(2016.11.17.), 해양보호구역, 제대로 알고 가자!!(2022년 12월 22일)

23) etoday(2016. 6. 30)(2022년 12월 22일)

### Ⅲ. 우리나라의 해양보호구역 관리

#### 1. 해양보호구역 제도 개요

##### 1) 정의 및 목적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 또는 해양생물 등을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어 국가 또는 지자체가 특정 공유수면에 대해 지정·관리하는 구역으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생태계법’) 상 해양보호구역과 「습지보전법」상 습지보호지역을 말한다. 법적으로는 해양생태계법 제2조 제14호에 규정되어 있다. 동법에서 말하는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해양경관 등 해양자산이 우수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구역으로서 제2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정의되어 있다. 즉, 해양생태계 및 해양경관 등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구역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가 특정 공유수면에 대해 지정 및 관리하는 구역을 말한다.

IUCN은 해양보호구역의 지정목적은 과학연구, 자연보호, 생물종과 생태계보호, 환경서비스 제공유지, 특히 문화와 자연경관 보호, 관광 및 여가, 교육,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문화와 전통의 유지 아홉 개로 설정하였다.<sup>24)</sup> 우리나라의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정의와 IUCN의 정의를 기초로 보면 해양보호구역 지정목적은 우수한 해양자산의 체계적인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통한 사회·문화·경제·생태적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의 해양보호구역의 개념은 해양생태계법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해양생태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과학연구나 문화와 관광의 개념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로 해양수산부가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할 때 실질적인 정책의 입안과 추진과정에서 이러한 문화와 관광 및 여가, 교육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다.

24) 해양환경공단(2009.3.30.), 해양보호구역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2022년 12월 22일)



## 2) 지정요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으로 크게 일곱 가지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첫째, 해양의 자연생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있는 해역, 둘째, 해양의 지형·지질·생태가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 셋째, 해양의 기초 생산력이 높거나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산란지 등으로서 보전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역, 넷째, 다양한 해양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거나 표본에 해당하는 해역, 다섯째, 산호초·해초 등의 해저경관 및 해양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해역, 여섯째, 해양생태계의 탄소 흡수원 기능을 유지하거나 증진하기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일곱째,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효과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이다.<sup>25)</sup>

이러한 지정요건을 볼 때 아래와 같이 IUCN의 여섯 가지 해양보호구역과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특이한 점은 해양생태계의 탄소 흡수원 기능을 유지하거나 증진하기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지정요건 중 하나로 기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이 개념의 경우 IUCN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 현재 국제사회가 당면한 탄소중립이라는 대명제에 대해 해양에서도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적절한 지정요건이라 판단된다.

## 3) 유형

IUCN에서는 해양보호역을 보호수준에 따라 크게 여섯 개로 분류하고 있다. 학술연구와 야생보호를 위하여 관리되는 보호구역을 I 구역인 절대보호구역으로 하고, 생태계 보존과 레크레이션을 위하여 관리되는 구역을 II 구역인 국립공원구역으로, 특정한 자연적 특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관리되는 보호구역을 III 구역인 천연기념물보호구역으로, 생태계 구성요소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를 통하여 보존되는 구역을 IV 구역인 서식지 및 종 관리구역으로, 육상과 해양경관의 보전과 레크레이션을 위한 보호구역을 V 구역인 경관 보호구역으로,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관리되는 구역을 VI 구역인 자원보호구

25) 해양생태계법 제25조 제1항

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IUCN의 해양보호구역 개념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해양보호구역에는 습지보호지역, 생태계보전지역, 천연보호구역, 명승, 국립공원이 포함된다.<sup>26)</sup>

IUCN의 개념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습지보전법에서 정하는 보호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해양생태계법 제25조에서의 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경관보호구역과 습지보전법 제8조에 의한 연안습지보호지역이 있다.

해양생물보호구역은 해양보호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이며, 해양생태계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해양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구역 또는 취약한 생태계로서 훼손되는 경우 복원하기 어려운 구역, 해양경관보호구역은 바닷가 또는 바다 속의 지형·지질 및 생물상(生物相) 등이 해양생태계와 잘 어우러져 해양경관적 가치가 탁월한 구역이다.<sup>27)</sup>

습지보전법에서의 연안습지보호지역은 습지의 효율적 보전, 관리를 위해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1)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2)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거나 나타나는 지역, 3)특이한 경관적, 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에 대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주변지역을 습지주변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sup>28)</sup>하는 구역을 말한다.

해양보호구역의 유형을 검토함에 있어 IUCN의 개념이 우리나라의 해양보호구역의 개념보다 좀 더 포괄적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정부조직법상 해양이라는 공간을 관리하는 해양수산부의 존재가 그 이유라고 보여진다. 해양수산부가 없는 국가의 입법에서는 환경부 차원에서 해양보호구역을 해양과 육지지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가 해양이라는 공간만을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보호구역을 위한 입법이나 유형에서도 다른 국가와 약간의 차이가 있게 된다.

26) 해양환경공단(2009.3.30.), 해양보호구역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2022년 12월 22일)

27) 해양생태계법 제25조 제2항

28) 습지보전법 제8조1항

## 2. 해양보호구역 지정현황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법 제25조에 따른 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양경관보호구역으로 해수부장관이 지정·관리(지방청에 위임)하고 제36조에 따른 시·도 해양보호구역으로 시·도지사가 지정·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갯벌을 대상으로 하는 연안습지보호지역을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관리 하도록 하고 있다.

해양보호구역 지정주체는 해양수산부장관(해양생태계법 제25조, 습지보전법 제8조)과 시·도지사(해양생태계법 제36조, 습지보전법 제8조)이다. 해양보호구역 범위의 경우 해양 보호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524호) 제2조 제1호에서 ["해양보호 구역"이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36조에 따라 지정·관리 되는 구역으로 「습지보전법」 제8조의 습지보호지역을 포함한다]라 규정함으로써 해양보호 구역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다.

해양보호구역의 지정절차는 지정권자가 지정하고자 하는 해양보호구역에 대해 몇 가지 내용<sup>29)</sup>을 포함한 지정계획서에 지형도를 작성하여 미리 해당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sup>30)</sup>

해양보호구역의 지정권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이지만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사전준비단계에서 해당 지자체에서 해양보호구역 후보지를 추천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관련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하고,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보호구역을 확정·고시한다.

29)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1)지정 또는 변경의 사유 및 목적, 2)주요 해양생태계의 현황 및 특징, 3)지정 대상구역 토지 및 인접한 토지의 용도지역 및 이용현황, 4)해양보호구역의 구분 및 관리방안, 5)어업권·양식업권·광업권 현황 및 도면, 6)법령상 규제지역 현황 등이다.

30) 해양생태계법 제26조(해양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등)

표-1. 해양보호구역 지정절차

사전 준비 단계	해양보호구역 후보지 추천	-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 결과 적합성 확인 - 지자체 지정 요청
	대상지역 정밀조사	- 해양보호구역 지정근거 부합여부 평가를 위한 관련 조사
지정 준비 단계	지정계획(안) 마련	- 해양수산부(시·도지사)
	시도지사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 시·도 의견수렴 - 주민설명회 개최
	관계 중앙부처 협의	- 환경부, 국방부, 국토부 등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정	해양보호구역 지정·고시	- 해수부장관 방침 및 관보 게재
	관련 정보시스템 게시	- 해수부*, 관련 지자체 누리집 게시 * 해양환경정보포털

자료: 해양수산부(2018), 해양보호구역이란. <https://www.mof.go.kr/>(2022년 12월 22일)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은 2001년 처음 무안갯벌(면적 약 42km<sup>2</sup>)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면서 해양보호구역 개념을 도입한 이래 2022년 3월 현재 총 32개 해양보호구역이 있다.

유형별로는 해양생태계보호구역의 경우 가장 최근 지정된 포항 호미곶 주변해역 (21.12.31일자)까지 현재 총 15개 해역의 면적 총 1,798.7km<sup>2</sup>가 지정·관리되고 있다.

표-2. 해양생태계보호구역 지정 현황(해양수산부, 2022.01월 기준)

NO	명칭	위치	면적 (km <sup>2</sup> )	특징	관리청	고시 일자
1	문섬 등 주변해역	제주시 서귀포시	13.684	해양보호생물 11종이 서식, 주로 해송이 발견	부산청	2002-11-05
2	대이작도 주변해역	인천광역시 옹진군	55.7	수질정화 및 산란장과 서식지 역할을 하는 거머리말과 애기거머리말 군락	인천청	2003-12-31
3	오륙도 및 주변해역	부산광역시 남구	0.35	여러새살이품로 학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게바다말 서식	부산청	2003-12-31
4	신두리사구 해역	충청남도 태안군	0.64	국내 최대 사구로 내륙과 해양생태계 연결하는 완충지역이며 통합적 생태계 형성	대산청	2002-10-09
5	가거도 주변해역	전라남도 신안군	70.17	해면의 일종인 빨강해면맨드라미 서식	목포청	2012-11-30
6	소화도 주변해역	전라남도 완도군	0.81	남해 고유종인 침해면맨드라미 서식	목포청	2012-11-30
7	나무섬 주변해역	부산광역시 사하구	0.275	대형 육식성 포식자로 연안생태계 최상위자인 나팔고둥 서식	부산청	2013-11-28
8	청산도 주변해역	전라남도 완도군	71.38	현존하는 해양화석종인 세로줄조개사돈 서식	목포청	2013-11-28
9	남형제섬 주변해역	부산광역시 사하구	0.1	다양한 해양보호생물 중 주로 밤수지맨드라미 서식	부산청	2013-11-28
10	울릉도 주변해역	경상북도 울릉군	39.44	수중 암반생태계 형성, 해양상태가 원시성을 유지, 유착나무돌산호 서식	포항청	2014-12-24
11	추자도 주변해역	제주시 추자면	1.18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출현하는 포기거머리말 서식	부산청	2015-12-29
12	토끼섬 주변해역	제주시 구좌읍	0.593	수질정화 및 산란장과 서식지 역할을 하는 거머리말과 애기거머리말 군락	부산청	2016-12-29
13	양양조도 주변해역	강원도 양양군	5.01	해양보호생물인 왕거머리말(잘피)가 0.13km <sup>2</sup> 범위로 서식	동해청	2017-12-08
14	통영선촌마을 주변해역	경상남도 통영시	1.9	거머리말 서식지 보호	마산청	2020-02-14
15	호미곶 주변해역	경상북도 포항시	0.25	게바다말과 새우말 서식지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	포항청	2021-12-31
합계			1,798.7			

자료: 해양수산부(2022.5), 해양보호구역 지정현황. [https://www.mof.go.kr/\(2022년 12월 22일\)](https://www.mof.go.kr/(2022년 12월 22일))

해양생물보호구역은 점박이물범과 상괭이를 보호하기 위해 가로림만 해역과 고성군 하이면 주변해역의 총 두 개 해역에 면적 총 94.14km<sup>2</sup>가 지정·관리되고 있다.

표-3.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 현황(해양수산부, 2022.01월 기준)

NO	명칭	위치	면적(km <sup>2</sup> )	특징	관리청	고시 일자
1	가로림만 해역	충청남도 태안& 서산	91.237 92.040 (0.8km <sup>2</sup> 확대)	천연잔파의 서식지와 어류의 성육장으로 체계적 보전·관리, 황해 대표적 해양생물인 점박이물범 서식	대산청	2016- 7-27 2019-12-17
2	고성군 하이먼 주변해역	경상남도 고성군	2.1	해양보호생물인 상괭이를 보호	마산청	2019-12-31
합계			94.14			

자료: 해양수산부(2022.5), 해양보호구역 지정현황. <https://www.mof.go.kr/>(2022년 12월 22일)

해양경관보호구역으로는 특이한 지형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해안 사구의 보령 소항사  
구 한 개 해역의 면적 5.23km<sup>2</sup>가 지정·관리되고 있다.

표-4. 해양경관보호구역 지정 현황(해양수산부, 2022.01월 기준)

NO	명칭	위치	면적(km <sup>2</sup> )	특징	관리청	고시 일자
1	보령소항사 구해역	충청남도 보령시	5.23	노랑부리백로, 알락꼬리마도요 등 법적보호종 서식지이자 특이한 지형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해안사구	대산청	2018-12-01
합계			5.23			

자료: 해양수산부(2022.5), 해양보호구역 지정현황. <https://www.mof.go.kr/>(2022년 12월 22일)

습지보호지역은 내륙습지와 연안습지로 나누어 지정되는데, 연안습지에 지정된 습지  
보호구역은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희귀하거나 멸  
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거나 나타나는 지역, 특이한 경관적·지형적·지질  
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에 지정된다. 이러한 연안습지에 해양보호구역을 설정한 것은  
2001년 무안갯벌을 시작으로 2021년 7월 20일 화성시 매항리 갯벌 14.08km<sup>2</sup>가 습지보호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국내 총 14개 지역에 면적 약 1,435.73km<sup>2</sup>가 지정·관리되고 있다.

표-5. 습지보호지역 지정 현황(2022.01월 기준)

NO	명칭	위치	면적(km <sup>2</sup> )	지정주체	고시일자
1	무안갯벌	전라남도 무안군	42.0	해양수산부	2001.12.28
2	진도갯벌	전라남도 진도군	1.44	해양수산부	2002.12.28
3	순천만갯벌	전라남도 순천시	28	해양수산부	2003.12.31
4	보성·별교갯벌	전라남도 보성군	31.85	해양수산부	2018.09.03
5	웅진·장봉도갯벌	인천시 옹진군	68.4	해양수산부	2003.12.31
6	부안줄포만갯벌	전라북도 부안군	4.9	해양수산부	2006.12.15
7	고창갯벌	전라북도 고창군	64.66	해양수산부	2018.09.03
8	서천갯벌	충청남도 서천군	68.09	해양수산부	2018.09.03
9	봉암갯벌	경상남도 창원시	0.1	해양수산부	2011.12.16
10	시흥갯벌	경기도 시흥시	0.71	해양수산부	2012.02.17
11	대부도갯벌	경기도 안산시	4.53	해양수산부	2017.03.22
12	신안갯벌	전라남도 신안군	100.86	해양수산부	2018.09.03
13	송도갯벌	인천시 연수구	6.11	인천광역시	2009.12.31
14	매항리갯벌	경기도 화성시	14.08	해양수산부	2021.07.20
합계			1,435.73		

자료: 해양수산부(2022.5), 해양보호구역 지정현황. [https://www.mof.go.kr/\(2022년 12월 22일\)](https://www.mof.go.kr/(2022년 12월 22일))

여기서 국내 해양보호구역 중 해양생태법에 의한 세 개 유형의 보호구역은 모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였으나, 습지보전법에 근거한 인천 송도갯벌 연안습지보호구역은 자치단체장이 지정했다는 점이 다소 특이하다.

### 3. 해양보호구역 지정범위 및 관리체계

#### 1) 지정범위

연안국이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 지정가능한 공간적 범위에 대해 여러 가지 의론이 있다. 해역의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해양보호구역 설정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연안국이 해양보호구역을 설정하는 데 있어 국가관할수역인 영해에 설정하는 것은 모두 동의하고 있으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해양보호구역은 아직까지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협약은 연안국

들이 선박으로 부터의 오염을 규제하기 위하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법령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권한 있는 국제기구를 통하여 모든 관계국과 적절한 협의를 거치면 가능하다고 한다. 이는 영국과 모리셔스 간 중재재판 판결에서 재판소는 영국이 모리셔스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양보호구역을 설정한 것이 협약을 위반하였다는 판정을 내린 것에 근거한 것이다. 또 다른 근거는 협약에서 국가들에게 부가하고 있는 해양환경보호 의무로부터 해양보호구역을 설정한 근거를 찾고 있다. 즉, 협약은 제192조에서 국가들에게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할 일반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제194조 제5항은 국가들로 하여금 “매우 희귀하거나 손상되기 쉬운 생태계, 고갈되거나 멸종의 위협을 받거나 위협에 처한 생물종 및 그 밖의 해양생물체 서식지의 보호와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양보호구역 설치가 이러한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취하는 조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sup>31)</sup>

환경운동연합은 한 국가가 설정할 수 있는 해양보호구역 범위를 관할해역인 영해와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해석하고 있다.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 측정기선에서 200해리까지이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은 어업이나 자원개발과 같은 경제적 활동과 함께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sup>32)</sup>. 공해에도 지역기구 등이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한다.<sup>33)</sup> 공해지역에 해양보호구역을 설정한 사례를 보면 2016년 10월 17~28일 개최된 35차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연례회의에서 유럽연합을 포함한 총 25개 회원국이 남극 로스해를 보호하고자 면적 약 155만km<sup>2</sup>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여 향후 35년 동안 연구를 위한 목적 이외에는 해양생물과 광물자원을 채취할 수 없게 하였는바, 이 조치 이후 북극해 등 다른 공해에서도 보호구역 지정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sup>34)</sup>

호주의 경우 1979년 Offshore Constitutional Settlement에서 주정부는 영해기선으로부터 최대 3해리까지 해양보호구역을 선언할 수 있으며, 영연방정부는 영해 일부와 함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sup>35)</sup> 1975년 대

31) 박찬호(2018), 전개논문, pp.271-273. 이 사건은 영국이 1965년 Lancaster House Undertaking에 따라 모리셔스에 반환 예정이던 차고스 군도의 주변수역에 모리셔스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해양보호구역을 설정함에 따라 모리셔스가 이 해양보호구역 설정의 적법 여부를 중재재판소에 기탁한 사건이다.

32) 유엔해양법협약 제56조 제1항(b)(iii)

33) 환경운동연합, 해양보호구역은 어디에 설정할 수 있나요?(022년 12월 22일)

34) 환경운동연합, 세계 최대 면적의 남극해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실현되다(2022년 12월 22일)



산호초법(Great Barrier Reef Marine Park Act 1975)에서는 호주의 관할 내에 적용하고 호주의 관할해역에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포함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sup>36)</sup> 이는 호주가 해양보호구역의 적용범위를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확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연세대학교 김현정 교수가 연안국의 해양보호구역을 영해이원에 설정가능한가에 대해 검토한 바 있다. 그에 의하면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다른 환경보호수역(생태수역, 해양보호구역 등)을 선포함으로써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인정된 것보다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하고자 하며, 이러한 관행은 기존 법규범과 일치하지 않는 연안국의 일방적인 관할권 확대(Creeping Jurisdiction)이자 새로운 법규범이 형성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생물다양성협약과 협약 당사국 회의 결정에 근거한 해양보호구역은 유엔해양법협약과 일반 국제법에서 인정되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타국의 항행 및 기타 적법한 해양이용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sup>37)</sup>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은 영해나 내수에 설정하고 있다. 해양보호구역은 유엔해양법협약에서 쓰이는 공식 용어는 아니다. 이는 유엔해양법협약이 1982년에 채택되었는데 반해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논의는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이후 본격화되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같은 맥락에서 연안국들은 현재 해양보호구역 설정이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조치가 아니라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의 한 형태로 설명하고 있음은 앞에서 살펴 보았다. 이러한 점을 받아 우리나라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는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sup>38)</sup>고 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권리는 항행 또는 상공비행의 자유, 해저전선 또는 관선 부설의 자유 및 그 자유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국제적으로 적법한 그 밖의 해양이용에 관한 자유를 누린다<sup>39)</sup>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쟁점은 해양보호구역이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을 위한 조치인가 하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해양생태계법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해양보호구역에서 행위제한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제한은 내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권리 즉,

35) Mengmeng Yin, Erika J. Techera(2020), "A critical analysis of marine protected area legislation across state and territory jurisdictions in Australia", 118 Marine Policy, p.2.

36) Great Barrier Reef Marine Park Act 1975, Article 5(2 and 4)

37) 김현정(2012). p. 8.

38)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

39)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4조

해양보호구역에서 해저전선 또는 관선을 부설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므로 배타적 경제수역에 연안국의 해양보호구역을 적용하기는 논란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의 해양공간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제외한 해양공간 즉, 영해까지는 사·도지사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역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sup>40)</sup>

또한 이를 근거로 해양수산부는 2019년 7월 제1차 해양공간기본계획(2019-2028)을 수립하면서 내수,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까지 공간적 범위를 확장한 바 있다. 동 계획에서는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통해 관할해역의 해양생태계 보호와 이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천명하고 있다.<sup>41)</sup> 그리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해양공간관리 수요에서 왕돌초 주변해역<sup>42)</sup>에서 해양생물 보호를 통한 관할해역 관리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sup>43)</sup>

비슷한 예로 호주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호초나 해양환경의 보호를 위해 자국의 관할범위인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해양환경 보호조치를 하고 있다. 호주의 대산호초법은 해양공원에서의 환경훼손 방지 또는 최소화 의무를 규정<sup>44)</sup>하고, 해당 구역에서의 단순 통항 행위 정도는 규제하지 않으나 해양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직·간접적인 손해를 미치는 행위의 경우 규제를 가한다. 이는 유엔해양법협약에서와 같이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연안국의 해양공원이나 해양보호구역의 설정과 같은 해양환경보호 조치를 인정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2) 관리체계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 관리는 해양생태계법에 따른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과 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 수립내용을 근간으로 한다.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은 해양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내용과 함께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 내실

40)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41) 해양수산부(2019a), p. 43.

42) 왕돌초는 2002년 해양지명위원회에서 해양수산부 고시 제2002-102호(관보 제15278호 2002.12.18)에 따라 공식 지정되었다. 이 고시에서 왕돌초(Wangdolcho)는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리 후포등대에서 080° 24.5km 지점에 있는 암초(수심 5.3m)로 12해리 영해 바깥인 배타적 경제수역에 위치하고 있다.

43) 해양수산부(2019a), p. 77.

44) Great Barrier Reef Marine Park Act 1975, Article 37AA

화·강화 등을 담은 계획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한다.<sup>45)</sup> 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은 권한이 위임된 지방해양수산청장이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법정 계획으로,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등이 주된 내용이다.<sup>46)</sup> 특히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해 법 제25조(해양보호구역의 지정·관리) 제4항과 제36조(시·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sup>47)</sup>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으며, 해양보호구역 관리·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평가사항은 1)해양보호구역 관리기본 계획의 이행사항에 대한 관리효과성 평가, 2)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 대한 연차별 평가이다.<sup>48)</sup>

해양보호구역의 관리주체는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 지방자치단체, 해양환경관리공단이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해양보호구역을 관리(법제9조)한다. 지방해양수산청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의 수립은 해양생태계법 시행령 제35조(권한의 위임) 제2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고,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지도·단속과,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중지 및 원상회복의 명령, 해양보호구역의 토지 등의 매수나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 대한 사업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하고(영 제35조 제1항) 있다.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sup>49)</sup> 해양환경공단이 해양보호구역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규정 제17조). 해양보호구역센터는 i)해양보호구역 지정

45) 해양생태계법 제9조

46)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다.(해양생태계법 시행령 제35조(권한의 위임) 제2항제7호)

47) 해양수산부 훈령 제524호(2020.3.27) 이 규정에 따라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내용은 1)해양보호구역 내 해양생태계의 현황 및 그 이용 현황, 2)해양보호구역의 보전 및 관리, 해양생태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에 관한 기본방향 및 주요사업, 3)해양보호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교육·홍보 및 민간협력 증진, 4)해양보호구역 내 보전·이용시설의 설치, 5)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 6)사업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등에 관한 사항(규정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담도록 하고 있다.

48)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49) 해양생태법 제24조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양보호구역의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2. 해양보호구역의 홍보에 관한 사항
3. 해양보호구역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해양보호구역의 정보공유 및 국제협력
5. 그 밖에 해양보호구역 관리를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및 확대에 관한 사항, ii)해양보호구역의 현황변화(사회·경제·생태계) 조사에 관한 사항, iii)해양보호구역의 관리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iv)해양보호구역 교육프로그램 및 역량 강화 체계 개발·운영, v)해양보호구역의 국내외 네트워크 및 국제협약 이행에 관한 사항, vi)해양보호구역대회, 세계습지의 날 기념행사 등 인식증진 및 홍보에 관한 사항, vii)해양보호구역 시민모니터링 통합사무국 운영, viii)지역해양보호구역센터 네트워크 지원, ix)해양보호구역 중앙관리위원회 운영 지원, x)그 밖에 해양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지속가능한 이용·관리기반 구축, 가치증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등의 수행기능을 한다.<sup>50)</sup>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 관리체계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해양보호구역 지정과 함께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sup>51)</sup>과 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이를 통해 연차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또한 해양보호구역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중앙관리위원회<sup>52)</sup>와 지역관리위원회<sup>53)</sup>를 두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보호구역 지정과 함께 관리를 위한 예산을 배분하고, 해양환경공단은 해양보호구역 지정 지원과 관리 및 평가를 수행하며, 지방청과 광역단체는 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점검을 진행한다. 기초지자체는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된다.

그러나 해양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체계를 분석함에 있어 내륙습지를 관리하는 환경부와의 관리체계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환경부는 우리나라의 국가습지관리체계 개선과 국가생태자원의 지속적인 보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환경부와 UNDP간 협약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설치한 UNDP/GEF 국가습지보전사업관리단과 UNDP/GEF 국가습지보전사업 시범사업관리단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해 「UNDP/GEF 국가습지보전사업관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sup>54)</sup>을 2009년 8월 제정하였다. 국가습지사업단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한국의 습지를 보전하기 위하여 유엔개발계획 및 국제환경기금이 지원하고 환경부가 실행하는 프로젝트로 습지에 대한 다양한 대중 인식증진 사업을 계획 및 실행하고

50)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해양보호구역센터는 2010년 해양환경공단에 설립되었다.

51) 이 기본계획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해양생태계법 제9조제2항)

52) 중앙관리위원회는 1)해양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해양보호구역 연차별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3)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시행 및 사업성과 평가에 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규정 제13조)

53) 지역관리위원회는 1)해양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해양보호구역 연차별 세부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시행 및 성과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해양보호구역의 보전·관리를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검토·조정한다.

54) 환경부훈령 제859호, 2009. 8. 18 시행

있다.

습지사업단은 아홉 가지의 기능<sup>55)</sup>을 담당하고 있는데 해양환경공단의 해양보호구역 센터와 기능을 비교해 보면 습지보전 관리·제도 개선 등 습지정책 연구·개발사업이나 내륙습지조사 등 조사·연구사업, 예산, 편성, 집행 및 결산과 같이 습지보전을 위한 실질적이고 예산의 편성과 같은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해양환경공단의 해양보호구역센터의 경우 습지사업단과 같이 해양보호구역을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연구개발이나 예산편성권이 없다 보니 환경부의 내륙습지 관리와 비교하여 연안습지의 관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해양이라는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해양생태계법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관리가 환경부의 내륙습지 관리와 비교하여 예산의 편성이나 연구개발과 같은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를 찾는 게 해양수산 분야의 임무가 되고 있다.

## IV. 해양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행위제한과 관리 문제점

### 1.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해양생태계법상 해양보호구역에서는 폭발물이나 그물의 사용, 인공구조물의 건축 등 여덟 가지의 행위와 함께 소리·빛·진동·악취 등을 내어 해양생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해양보호생물의 산란지·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sup>56)</sup>. 다만, 해양보호구역 범위에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이나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 포함)가 포함된 경우는 「자연공원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sup>57)</sup>(법 제27조 제1항 단서 규정) 해양보호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1)군사목적에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sup>58)</sup>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여덟 가지 항목이

55) UNDP/GEF 국가습지보전사업관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56) 해양생태계법 제27조제1항; 해양생태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57) 해양생태계법 제27조제3항

58)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해당된다(법 제27조제2항).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함으로써 해양생물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제한하는 등 해양생물의 산란지와 서식지를 보호하려는 취지는 분명하다. 또한 이러한 원칙 하에 해양보호구역의 보호·관리를 위한 행위나, 이와 관련한 필요 시설물의 설치, 지역주민의 고유한 생활양식의 유지·향상 또는 기존 영농·영어(營漁)행위의 지속 등을 위해 대통령령<sup>59)</sup>으로 정하는 행위<sup>60)</sup>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기도 하다. 해양보호구역 지정과 그에 따른 관리 효과 제고를 위해서는 이보다 적극적인 행위제한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연안에서의 경제활동이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을 감안하면 제도 시행을 위한 초기에는 그나마 합리적인 방안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해양생태계법 제27조 제1항 제1호의 “해양보호구역에서 해양보호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해양생물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생물을 포획·채취·이식·훼손하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훼손하기 위하여 폭발물·그물·함정어구를 설치하거나 유독물질·전류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행위제한을 적용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해양수산부령상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양생물”이란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해양생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양생물을 말한다”라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고시가 아직 공표되지 않은 문제는 해양보호구역에서의 영어(營漁) 행위 관리 등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지역주민의 생활양식 유지를 위한 기존 어업 행위 등은 부득이하게 허용하고 있지만 사실 해양보호구역 지정목적인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 보호·보전을 위해서는 영어(營漁)행위가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해양생태계법 제정(2006.10.4일자) 이후 현재까지 약 16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규정이 아직 미비하다는 것은 흠결사항이라 아니할 수 없다.

1. 건축물·공작물의 붕괴·폭발 등으로 인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그 밖의 현존하는 위험으로부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9) 이 행위는 해양보호구역 또는 해당 해양보호구역에 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인접지역(이하 “인접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해당 해양보호구역이나 인접지역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어로행위 또는 수산물 채취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60) 해양생태계법 제27조 제2항 제3호

## 2.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상 해양보호구역 관리 문제점

### 1) 제1차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의 성과 평가

해양생태계법 제9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현재 제2차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2019~2028)이 수립되어 있다. 동 계획에서는 제1차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2009~2018)에 대한 성과 평가가 이루어졌다.<sup>61)</sup> 제2차 기본계획상 해양보호구역과 관련해서는 “목표 1(해양생태계 서식지 보호)”에서 현황과 문제점, 관리여건 파악과 함께 각 세부사업을 적시하고 있다. 해양보호구역 관리 문제점으로는 해양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양생태계 복원사업 확대 등 해양생태계 서식지 보호를 위한 사업의 양적 증가는 있었으나, 정책의 효과 검증 등 사후관리는 미흡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지역민들의 긍정적 체감효과가 미비하여 보호구역 추가 지정에 한계로 작용했고, 일부 해양보호구역에서의 경우 실질적 행위 규제가 없어 국제적 정의<sup>62)</sup>에 부합하지 않았으며 같은 맥락에서 해양생물 자원의 증가 효과가 미미하였다는 것<sup>63)</sup> 등이 그 이유였다.

### 2) 제2차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상 해양보호구역 관리방향 및 문제점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제1차 기본계획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4장(계획의 기본방향)에서 5대 추진전략과 16개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sup>64)</sup> 해양보호구역과 관련해서는 추진전략 1의 “해양생태계 서식지 보호”와 관련된다. 해양생태계 서식지 보호를 위해 i) 해양생태 네트워크 구현, ii)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 강화, iii) 훼손된 해양생태계 복원 확대 등 세 가지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있다. 이들 세 가지 중점 추진과제 중에서 두 번째 과제인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 강화”를 위해 i) 해양보호구역 확대, ii) 해양보호구역 관리 내실화, iii) 해양보호구역 관리기반 강화 등 세 가지

61) 해양수산부(2019b), p.9-17.

62) 세계자연보전총회(2016) 결의(WCC-2016-Res-050-EN): 해양의 30% 보호구역 지정, 그 중 30%에서 모든 채취 행위 금지

63) 해양수산부(2019b), p.59.

64) 해양수산부(2019b), p. 57. 5대 추진전략은 1. 해양생태계 서식지 보호, 2. 해양생물 보호·복원, 3. 해양생태계 서비스 혜택 증진, 4.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반 선진화, 5. 해양생태계 거버넌스 체계화 등이다.

사업을 추진한다. 이하에서는 이들 추진사업을 통해 해양보호구역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방향을 알아보고 이 계획의 문제점은 없는지를 알아보기로 한다.

첫 번째 사업인 해양보호구역 확대와 관련하여 생물다양성협약 아이치목표(해양의 10%) 달성을 위해 해양보호구역 지정 면적을 확대하고 해양생물 및 해양경관보호구역 지정 확대, 갯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추진(2019~)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소요예산이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

두 번째 사업인 해양보호구역 관리 내실화와 관련하여 2003년 이후 매년 1-2개소씩 해양보호구역을 신규로 지정하였으나, 지정 이후 체계적 지속적 관리가 미흡하고 지정에 대한 체감효과가 부족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네 가지의 세부사업을 시행한다. 첫 번째 세부사업은 민·관·산·학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해양보호구역 관리 기본계획 검토 및 관리사업 심의를 위한 해양보호구역 중앙 심의위원회, 지역관리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해양보호구역 사업성과 및 문제점의 분석·평가 피드백 시스템을 2019년부터 마련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세부사업은 해양보호구역 후보지 발굴 및 보호구역 지정 효과 분석을 위한 조사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세부 지표 마련 및 매년 실시하는 시민모니터링과 5년 단위의 정밀조사를 바탕으로 해양보호구역 생태계 변화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세 번째 세부사업은 해양보호구역 관리 기본지침 마련 및 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 수립·이행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해양보호구역 관리 기본계획 수립(5년) 및 보호구역 관리계획 이행평가(매년), 체계적 보호구역 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네 번째 세부사업은 지자체 보호구역 관리자 역량 강화 및 지역전문가를 육성·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해양보호구역 관리 관련 전문교육과 정 신설 등 정기적 교육 실시 및 지역주민 교육, 자격 인증 등을 통해 지역전문가를 육성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 사업인 해양보호구역 관리 내실화는 해양보호구역을 왜 지정해야 하는지 알게 하고 지정목적에 맞게 관리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이해관계인의 이익보호<sup>65)</sup>라는 부분이 매우 중요함에도<sup>66)</sup>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물론 이 부분은 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

65) 해양생태계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에서 어느 정도 반영될 수도 있으나 해양보호구역이 지역민과 어울려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전반에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의미가 전달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조치가 필요하며 이러한 지원조치는 궁극적으로 해양보호구역 관리를 내실화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사업인 해양보호구역 관리기반 강화와 관련하여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효과성 증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및 관리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네 가지의 세부사업을 시행한다. 첫 번째 세부사업은 해양보호구역 가치평가 및 위협요인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해양보호구역 지정관리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을 통해 해양보호구역의 가치<sup>67)</sup>를 규명하고 보호구역별 관리 위협요인 파악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두 번째 세부사업은 국제적 수준의 보호구역 관리효과성 평가기준을 마련한다고 한다. 이를 위해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채택된 보호구역 관리평가 기준(MEE)<sup>68)</sup>을 국내 여건에 적합하게 조정하고 평가(5년 주기)를 수행하여 이행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세 번째 세부사업은 해양보호구역센터를 강화한다고 한다. 즉, 해양환경공단이 해양보호구역 관리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양생태계법에 해양보호구역센터의 공단 설치를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네 번째 세부사업은 도심형 해양 보호구역 방문객 센터를 설치·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해양보호구역의 홍보 강화를 위해 대도시에 해양보호구역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한다. 이 세 번째 사업에서는 해양 보호구역의 관리 효과성 증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및 관리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거버넌스 구축에 있어 해양보호구역 지정과 지속가능 관리를 위해서는 일반 대중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거버넌스 구축에 있어 해양보호구역과 해양생태계에 대한 대중의 지식수준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해양생태계의 환경적 위협과 해양보호구역의 이점에 대한 대중의 높은 이해수준은 신규 해양보호구역 지정·관리와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높은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도시에 해양보호구역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 단순히

66) 육근형 외(2014), p. 188, pp. 192-197.

67) 전 세계 해양보호구역 30%까지 확대 시 2050년까지 4,900~9,200억 US달러의 이익과 15~18만개 일자리 창출 가능('16, 세계자연기금)

68) MEE(Management Effectiveness Evaluation): 보호구역 관리 전반에 대한 평가도구로서 생물다양성협약 제7차 COP('04.2, 말레이시아)에서 공식 채택, 당사국에 '15년까지 보호구역의 60%에 MEE 수행 권고

홍보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일반 대중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V. 결론 : 해양보호구역 관리의 실효성 강화 관리방안

21세기 들어 인간활동에 의한 기후변화가 심화되면서 국제사회는 지구온난화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탄소를 저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사회는 바다가 탄소저정소의 역할을 한다는 데 착안하여 해양이 가지는 가치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 이러한 노력은 미국, 호주 등 개별국가 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협약 등 국제적 차원에서 해양생물다양성 회복 및 기후변화에 대한 바다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해양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있음을 알아보았다.

우리나라도 우수한 해양자산의 체계적인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통한 사회·문화·경제·생태적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 해양생태계법 등 해양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해양보호구역 개념이 매우 오래전에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범위가 영해까지인지 배타적 경제수역까지인지에 대한 검토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가능하다는 주장은 유엔해양법협약 제56조 제1항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의 해양환경 보호와 보전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는 규정과 함께 공해지역에서도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에서 공해지역에 해양보호구역을 설정한 사례를 들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배타적 경제수역에 연안국의 해양보호구역 설정에 우려는 표명하는 견해는 유엔해양법협약과 일반 국제법에서 인정되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타국의 항행 및 기타 적법한 해양 이용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 한편, 호주의 대산호초법에서는 해양공원에서 환경훼손 방지 또는 최소화 의무를 규정하면서 유엔해양법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안국의 관할범위인 배타적 경제수역에까지 연안국의 해양공원이나 해양보호구역의 설정과 같은 해양환경보호 조치를 인정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해양공간계획법과 제1차 해양공간계획에서 천명한 바와 같이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범위를 배

타적 경제수역에까지 확대하되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해양보호구역을 실효성 있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적절한 배려 및 평가, 해양보호구역 관리 거버넌스 개편, 해양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관리수단 개발 및 연구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우선 첫째,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적절한 배려 및 평가와 관련하여 제2차 해양생태계보전·관리 기본계획에서 해양보호구역의 관리와 관련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시한 전략과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이해관계자의 확인과 이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실질적 조치와 함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체 해양보호구역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해 개별적으로 특수한 해양보호구역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질문제를 진단·평가하여 해양보호구역에 있어 어민, 지역주민, 해양환경관리공단 등의 역할 등 해양보호구역의 실질문제 해결을 위한 이해관계자의 범위, 참여 숫자, 참여범위, 평가수준 등 세부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두 번째, 해양보호구역 관리 거버넌스 개편과 관련하여 해양에 설정된 해양보호구역의 국가적 차원의 관리를 위해 해양수산부, 환경부, 문화재청 등 관련부처의 협력과 개별 지역의 해양보호구역 지정·관리를 위한 범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해양보호구역의 지정이후 목적을 지속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연차별 협력(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해양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관리수단 개발 및 연구조사와 관련하여 해양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개별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영향평가 방법 및 기술의 개발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연구조사를 병행 수행함으로써 관련 정보를 축적하고 이를 통해 과학에 기반한 해양환경관리 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해양공간의 과학적 관리를 위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예비 해양보호구역으로 선정하여 지속적인 해양건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해양보호구역 과학적 관리 수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것은 자연재해로부터의 연안보호나 생물종의 건강성 확대뿐만 아니라 탄소저장을 통한 기후변화 저감과 같은 공익적 이익뿐만 아니라 어업이나 레저관광의 활용과 같은 여러 가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이익은 궁극적으로 바다의 건강성 확보를 통해 인류의 건강을 확보한다는 명제를 실현시키기 위해 개별 국가들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해양보호구역의 확대를 국가계획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위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

투고일	2022. 10. 27
1차 심사일	2022. 12. 02
게재확정일	2022. 12. 12

---

## ■ ■ 참고문헌

---

1. 국민의힘. 2022. 대선공약집
2. 김현정. 2012.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의 변화에 관한 연구 - 생물자원 및 해양환경보호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3. 박수진 외. 2019. 「해양에 설정된 보호지역, 지역주도형·협력적 접근방식으로 개편해야」. 『KMI 동향분석』, VOL.15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 박찬호. 2018.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 해양보호구역에 관한 고찰」.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제59권 제3호. pp. 271-273.
5. 배성환. 2005. 『외국사례로 살펴 본 국내 해양보호구역 관리 효율성 향상 방향』. 보호지역관리 효율성 향상과 국제화를 위한 관계기관 및 전문가 워크숍
6. 세계자연보전총회. 2016. 결의(WCC-2016-Res-050-EN)
7. 육근형 외. 2014. 『정책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해양보호구역 실효성 강화 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8.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20.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해양수산부야 기후변화 대응전략』.
9. 해양수산부. 2018. 해양보호구역이란. (2022년 12월 22일)
10. 해양수산부. 2019a. 제1차 해양공간기본계획(2019-2018)
11. 해양수산부. 2019b. 제2차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2019년-2028년)
12. 해양수산부. 2022. 해양보호구역 지정현황. (2022년 12월 22일)
13. 황명준. 2021. 「일본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현황 및 시사점」. 『기후변화법제연구 이슈페이퍼』. 2021년 4호 p.2. 한국법제연구원
14. Mengmeng Yin, Erika J. Techera. 2020. “A critical analysis of marine protected area legislation across state and territory jurisdictions in Australia”. Vol.118, Marine Policy.
15. Brayden Cockerell, Robert L. Pressey, Alana Grech, Jorge G. Alvarez-Romero, Trevor Ward, Rodolphe Devillers. 2020. Representation does not necessarily reduce threats to biodiversity: Australia’s Commonwealth marine protected area system, 2012~2018, Vol.252, Biological Conservation.
16. Emily T. Saarman, Mark H. Carr. 2013. “The California Marine Life Protection Act:

- A balance of top down and bottom up governance in MPA planning”. Vol.41, Marine Policy.
17. John J. Bohorqueza,b, Anthony Dvorskasa, Ellen K. Pikitch. 2019. “Categorizing global MPAs: A cluster analysis approach”. Vol.108, Marine Policy.
  18. 이투데이. 2016. 「외국 해양보호구역 어떻게 운용하나」.  
<https://www.etoday.co.kr/news/view/1350563>(2022년 12월 22일)
  19. 한국세계자연기금. <https://www.wwfkorea.or.kr/?229650/sustainablefishing-mpa>(2022년 12월 22일)
  20. 해양환경공단. 2016.11.17. 해양보호구역, 제대로 알고 가자!!  
<https://m.blog.naver.com/koempr/220863090448> (2022년 12월 22일)
  21. 해양환경공단. 2009.3.30. 해양보호구역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2022년 12월 22일).  
[https://blog.naver.com/mltm\\_ocean/60065115148](https://blog.naver.com/mltm_ocean/60065115148) (2022년 12월 22일)
  22. 환경운동연합, 세계 최대 면적의 남극해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실현되다.  
<http://kfem.or.kr/?p=169193> (2022년 12월 22일)
  23. 환경운동연합, 해양보호구역은 어디에 설정할 수 있나요? <http://kfem.or.kr/?p=219394>  
(2022년 12월 22일)
  24. Australian Marine Parks. <https://parksaustralia.gov.au/marine/management/programs/>  
(2022년 12월 22일)
  25. Australian Marine Parks. <https://parksaustralia.gov.au/marine/management/plans/>(2022년 12월 22일)
  26. Australian Marine Parks. <https://parksaustralia.gov.au/marine/management/resources/>  
(2022년 12월 22일)
  27.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https://www.cbd.int/sp/targets/>(2022년 12월 20일)
  28. IUCN. <https://www.iucn.org/theme/marine-and-polar/our-work/marine-protected-areas>  
(2022년 12월 22일)
  29. Marine Conservation Institute. <https://mpatlas.org/zones/> (2022년 12월 20일)